

# 2017년 거시경제로 미루어본 노동시장 전망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의 유력한 전망기관에 의하면 2017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낮다. 기재부와 OECD는 2.6%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5%, 한국개발연구원은 2.4%로 전망했다. OECD 국가들 평균의 견지에서는 그다지 나쁜 성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적에 비추어 보아도 올해의 성장전망은 지극히 어둡다. 수출이 2016년 말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수출, 투자, 소비 모두 2016년보다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뒤이은 트럼프의 등장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영국의 국민투표까지만 해도 세계는 예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세계는 보편성에 입각한 자유주의·국제주의 퇴조와 국수적인 자국우선주의 범람을 우려하고 있다. 그것이 한국의 외교 안보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그 자체로 새로운 충격의 근원이다.

보호무역조치는 보복의 연쇄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미국이 타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유럽과 한국과 인도와 일본은 WTO에 제소할 것이다. 트럼프가 자유교역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면 세계경제는 경제규모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20세기 초의 공황상태를 다시 경험할 수도 있다. 결과가 파국적이라는 것을 아는 만큼 그런 결과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분쟁 차제나 분쟁 너머의 신질서가 아니더라도,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

에서 초래되는 불확실성은 문제로 남는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은 트럼프 당선과 무관하게 이미 예견되던 바이다. 트럼프의 달러 강세 저지 정책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이유들만으로도 당분간 원화의 환율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수출입 기업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투자도 제약될 것이다.

최경환부총리 시절 전매까지 허용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전매는 가수요자의 투기행위가 물리는 곳이다. 다른 실물경기 진작이 뒤따르지 못한 탓에 과열된 부동산 경기는 결국 수축을 앞두고 있다. 공급과잉이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공급을 억제할 필요성에서 나온 8.25대책을 당장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받아들인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고 가계부채도 덩달아 증가했다.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조율하려는 11.3대책에 금융대출 규제가 더해져 2017~18년 공급량이 수요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입주물량이 2017년 37만 가구, 2018년 41만 가구에 달한다. 분양가는 하락하고 기존 아파트 가격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 둔화는 명약관화하다. 이는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시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물량이 2018년까지 쏟아지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일이지만 수요기반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국을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수요를 정밀 타격하는 데 실패해서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건설업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이른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4배 이상 빨리 증가했다. 자연자 부채가 500조 원이다. 다행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위험한 부채는 100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 정도는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불안감과 함께 거시경제 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다. 가계부채 중 1/2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의 1/2이 내 집 마련에 실제로 사용된 자금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반은 주택 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데 이는 거시경제 운용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관리 대상이다. 금리를 1%포인트 높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13조 원 늘어난다. 약 10조 원의 소비 감소가 있을 것이다. 금융자산 규모가 2,000조 원에 이르므로 늘어나는 소비도 있겠지만 소비성향이 높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즉 1%포인트

만 금리를 인상해도 현재의 소비 증가율이 1/3 이상 둔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구조적 변혁 없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명분 아래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성과는 담보하지 못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 경제운용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같은 수출, 투자, 소비 전망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성장률 전망을 2.5%에 그치게 한 이유이다. 소비와 투자 부진은 저소득층 실업자의 소득과 생계지원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다. 한층 낮아진 성장률에 따라 고용사정도 어려울 것이어서 수년간 누적되어 온 청년층 고용사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한진해운 파산에 이어 지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오던 조선산업이 올해 본격적인 인력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기간산업 대형 기업의 구조조정은 대기업 일자리의 감소를 의미하여 다른 일자리 감소와 달리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 이 때문에 체감 고용사정은 더 어려울 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의 선방으로 지난 연말 수출이 증가한 점은 그래도 손상을 입지 않고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과 기업이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준다. 지난 10년간 과거보다 성장률은 저하면서 고용탄력성(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는 점도 위안을 주는 면이지만 고용탄력성이 증가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성장률 저하로 인해 잃은 일자리를 상쇄할 만큼은 아니다. 결국 2.5%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올해의 고용증가는 23만~24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다. **KLI**